

與野, ‘대선 공통공약’ 입법 속도… 이견 법안도 협치 나서

與野 정책위의장·수석부의장 만나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구성
200여건 공통공약, 국정과제 반영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이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 부의장과 상견례를 했다.

이들은 모두발언과 비공개 회동을 거친 후 여야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을 추려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문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추산으로 (공통 공약이) 200여건 되고, 국민의힘 추산으로 110여건 되는데 실무선에서 만나 추진 과제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 /뉴시스

앞으로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등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지난해 4·10 총선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AI기본법과 예금자보호법 등 100여건의 공통공약을 정리해 입법한 것을 모

델 삼아 서로 이견을 좁혀갈 예정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4년 총선 당시 김상훈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서 공통 공약을 서로 추려내 신속 입법했다”며 “AI기본법,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100여건이 넘는 입법을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 정책위의장이 6월 10일에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낸 공약을 입법 추진하자고 했고, 민생 공

통공약 추진 협의회 재가동을 제안했다”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실에서 이견이나 논란이 존재하는 법들이 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업4법, 방송3법, 화물운수사업법 등이 일방통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한

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면서도 국회의 거대 여당”이라며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 할 것이다. 야당과 함께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선 이후 역시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시즌2를 진행해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자체 스크린해 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더라. 입법을 필요한 것을 추려보니 80여건이 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모든 야당께 공약을 전달해주면 공통 공약을 추려서 우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대략 비슷한 공통 공약 규모가 확인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지난 6월 10일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운송비용 등 확대 등은 국민의힘안이 민주당안보다 더 전향적이라고 고백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격 사퇴… “당대표 도전하겠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 거부”
지도부서 安 인적쇄신안 수용 안 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7일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수락 6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사퇴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제안한 인적쇄신안을 지도부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이후 인적쇄신안을 비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 인선안이 합의 되기 전에 최소한 두



분의 인적쇄신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었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주말 동안 여러번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제가 혁신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적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가) 실패하고 우리 당에 더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 대상이 되는 두 명의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답했다.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이나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안 의원의 대답을 종합해봤을 때, 안 의원이 겨냥한 인적쇄신 대상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 논란 때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였던 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일 것으로 추측된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에 강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혁신위가 먼저 신뢰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출당이나 추후 총선 불출마 등 구체적인 인적쇄신 방법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최소한의 인적쇄신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며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의 기자회견 바로 전, 비대위는 안철수 의원과 합의한 안이라며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박성훈 국민

의힘 원내대변인은 최형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 혁신위원으로 인선됐으며 1명은 추후에 밝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비대위가 합의되지 않은 안을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자체가 합의된 안이 아니다. 분류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현역 의원, 원외당협위원장, 비(非)원외당협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합의된 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 합의해준 바 없다”며 “종게 말씀드리다면 제가 합의한 걸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혁신위 구성 공약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 의원은 송 비대위원장의 혁신 의지에 대해 “보도와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구와 경북의 우리 당 지지를 자체도 절반 수준을 떨어져 있다”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론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의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철수 위원장께서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며 “내용에 대해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선 백서를 통해서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누가 책임져야 할지 백서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라 혁신위와 비대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에 “국정집행 잘 챙겨달라”

첫 주례회동서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안전, 질서, 민생 분야에서 국정 집행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낮 12시 대통령님과 김민석 신임 총리 간의 오찬 회동이 있었다”면서 “(이대통령은)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등 분야에서 유념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며 “예컨대 산업 재해, 인재(人災)로 불리는 자연 재해, 교통사고 등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업무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상황 점검, 기타 대통

령 지시·위임 사항을 국무총리의 주 업무로 조정해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후 인재 유출 문제, 의정 갈등,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사항 등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 수석은 인재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와 관련해 AI(인공지능)·바이오 등 분야의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대통령실, 청년 삶 개선할 청년담당관 채용

정책제안서 발표·면접으로 심사

대통령실이 청년 정책 수립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년 관련 업무를 맡는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청년담당관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7일 오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선발된 청년 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는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